

사회적 위험과 국민인식: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Social Risks and Public Awareness:
Policy Implications*



남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대와 사회적 보살핌의 부족,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증대, 절대적상대적 빈곤의 증가, 근로빈민층 확대, 사회적 양극화 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정책적 수요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볼 때, 젊은층과 노년층, 사회적 위험을 경험한 층에서 친복지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경제적 위험의 경험, 가계적자 등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한 집단은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이 집단은 일자리 마련, 실업자 지원, 주거생활지원, 육아서비스 제공 등 정부의 역할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인구학적인 요인 외에 사회적 위험의 경험여부가 복지지향과 정책수요에 있어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들어가며: 위험사회의 도래와 사회적 위험

최근 위험(risk)이라는 개념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과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는 자연재해 관련위험, 건강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등이 대표적이다(정무권, 2012). Beck(1992)은 위험을 재앙(disaster)과 비교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발생가능성이 있는 미

래의 사건”이라고 정의한다¹⁾. 즉 위험은 ‘불확실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측정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의된다²⁾.

한국사회도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부상에 따라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2009년도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1.4%가 우리 사회를 ‘위험한 사회’라고 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대처해야 할 위험으로 실업 및 빈곤, 에너지 고갈과 고유가, 먹을거리 위험, 노후 불안, 대기 및 수질오염, 급격한 기후변동 등과 함께 사이버범죄, 사생활침해, 이혼율 증가, 사교육

1) Beck Ulrich(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

2) Beck, Ulrich(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Stanford University Press.

비 폭등 등을 들고 있다³⁾. 최근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험사회의 인식조사에 의하면 영역별로 위험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때 생애주기, 경제생활, 환경의 순으로 위험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⁴⁾.

위험은 복지국가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첨예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는 1997년까지 대체로 평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계급과 계층의 양극화, 신빈곤 계층의 등장, 노동시장의 왜곡,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실업의 대증화, 가족해체 등의 사회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⁵⁾.

전통사회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두려워했던 사회적 위험이란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의 복지가 위협받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 속의 인간들은 점차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과거와는 달리 많은 개인들이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며 더욱 의존적이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들의 발생원인은 주로 당사자의 잘못보다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량실업, 직업병, 환경오염, 교통사고, 노후빈곤과 같은 현상은 산업화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⁶⁾.

즉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층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사망, 노령, 산업재해, 실업 등이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것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글로벌 경제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해체, 젠더문제, 돌봄문제 등 기존의 산업화 시대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등장하고 있다⁷⁾.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사회변동의 결과 사람들이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되는데 이는 가족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의 움직임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⁸⁾.

한국사회에서는 성장지상주의 이념과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성원들의 일상적 복지와 안전을 보

3)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중앙일보·중앙대 차세대 에너지안전연구단(2009),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보고서.
 4) 김미숙·이상영·정진욱·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인준(1998), 외환·금융위기의 특징과 IMF, 『IMF 체제의 사회과학적 진단』 서울대학교 출판부; 송정기·박재규(2001), 농촌 지역주민의 사회계층과 일상생활의 변화, *농촌사회*, 11(2), pp.37-66; 송호근(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 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23~50; 김학주(2004), 가구구조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pp.109-131; 전병유(2007),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연구: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근계층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13(2), pp.171-243.
 6) 김영란(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2), pp.41-69.
 7) 정무권(2012), 위험사회론과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 사회적 위험의 거시적 연구를 위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pp.195-224.
 8) Esping-Andersen, G.(1999), *Social Form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Taylor-Gooby P.(2004), "New Risks and Social Change," *New Risks, New Welfare*, ed. by P. Taylor-Gooby, Oxford University Press.

장(social security)하기 위한 모색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가의 취약한 위험관리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들이 나타났⁹⁾. 사회적 위험의 부상 에 따라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후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등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현재 한국사회는 서구와는 달리 전통적 사회의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대와 사회적 보살핌의 부재,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증대, 절대적·상대적 빈곤의 증가, 근로빈민층 확대, 사회적 양극화 현상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의 위험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생계 위험과 사회해체 위험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¹¹⁾.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자산의 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실업, 부도와 신용불량과 같은 경제적 위험과 함께 건강악화, 자살충동,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스

로 중산층에서 이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개인해체 및 가족해체와 같은 일상의 부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따라서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순차적으로 나타난 서구와는 달리, 두 개의 위험군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과 잠재적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는 중층적인 사회적 위험 속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현재 서구사회에서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전지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국가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로 인하여 구사회적 위험과 대비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중적인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 개인과 사회집단에 미치는 사회적 위험의 파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구 사회적 위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위험의 성격이 복합적이 되며 특정 계급 또는 위험집단에게 위험이 집중적 또는 중첩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들의 발생과 상호관계, 그 효과는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이 되고 있다¹³⁾.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은 사회

9) 임현진 외(2002).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0) 김영란(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2), pp.41-69.

11) 김영란(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40(2), pp.189-226.

12) 남은영(2009). 외환위기 이후 계층의 양극화: 변화된 일상과 소비생활, **조사연구**, 10(1), pp.1-32.

13) 정무권 (2012). 앞의 책

경제적 박탈로 인한 경제적 위험, 노동시장과 일상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위험이다. 사회적 위험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던 노동시장 영역과 관련된 실업 및 고용불안정의 위험을 살펴 보고 가계의 경제적 위험과 같은 일상생활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의 주요 양상들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집단들의 특징, 복지지향 및 지지도,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삶과 사회에 대한 조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¹⁴⁾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위험의 양상과 그에 따른 정책적 수요에 대해 분석하고, 각 사회집단에서 요구하는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부상과 사회정책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노동가능성(employability)의 약화, 그리고 가족 보살핌 책임에 의한 고용접근 제한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은 전후 복지정책으로 사회성원들에 대한 일정정도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가능케 한 반

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특징은 현재의 복지정책으로 그러한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¹⁵⁾.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특정한 위치를 유지하거나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무능력과 관련되며 보살핌 책임으로 인하여 임금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되는 위험이다. 즉 이러한 노동시장의 접근성은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새로이 대두되는 사회적 위험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보면, 첫 번째 노동시장에서 생신인구의 감소추세와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나타나는 위험이며 두 번째 영역은 전통적 가족의 틀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서 서구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부각되지 않았던 노동자층에서의 고용불안정, 저임금과 불투명한 직업전망(poor career prospect and pay)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적 세계화, 빠르게 도입되는 새로운 기술에 따른 기술혁신 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고용과 빈곤 양자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빈곤층을 구성하는 핵심층으로 부상하였다.

즉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문제, 안정되고 안전한 그리고 충분한 임금고용, 사회보장 유지문제, 유동적인 시장에서 적당한 훈련과 교육을 받을

14)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2012년 실시한 전국조사로서 설문문항의 구성은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측정하는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 등의 표준화된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정책, 정치참여, 신뢰, 인권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일대일 면접 조사방법이 사용되었으며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고 표본추출방법은 국가별 광역 행정구역의 인구비례에 따른 다단계층화표집방법이 적용하였음.

15) 김영란(2006). 앞의 책.

수 있는 기회 등에서의 문제가 야기된다. 경제적 변화, 특히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는 과거 복지국가 황금기에는 볼 수 없었던 고실업률의 지속, 장기실업자의 증가,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의 증가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는 무역의 자유화, 자본의 이동성, 범세계적인 경쟁의 격화로 기술변화의 속도를 크게 가속화해 오고 있으며 일자리 없는 성장 혹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의 성장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산업구조와 인력구조의 재조정, 기업조직의 슬림화를 골자로 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계층을 고용불안정이라는 위험에 노출시킨다. 그리고 노동계층 내부 구성집단에 서로 다른 효과를 창출하는데 경쟁력을 갖춘 노동계층에게는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미숙련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악조건을 제공한다¹⁶⁾.

따라서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장기실업의 증가,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과 함께 빈부격차의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실업과 고용불안정성, 빈곤은 과거보다 더 광범위한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산업사회에서의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특정 하위집단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하는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

과거의 복지국가는 “기여에 의거해 급여를 받

는”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의 중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형적인 직업경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비롯한 여러 위험들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¹⁷⁾. 이와 같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경제위기와 같은 급격한 경제변동이 근로소득 계층 및 실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위기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주요 피해자들은 기존의 복지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은 크게 일자리제공 사업, 실직자지원 사업, 자영업자지원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장 사업, 교육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의 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전문가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제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하였고 다음으로는 교육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생계지원, 주거지원, 자영업자지원, 실직자지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최근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한 전문가 조사(2012)에 의하면 ‘사회복지분야의 정부역할과 기능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94.0%, ‘축소/약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나고 있다¹⁹⁾. 즉 사회적 위험의 대응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부역

16) Room(1990). 'New Poverty' in the European Community, Policy and Politics.

17) 김철주 · 박보영(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와 복지국가의 현대화, *사회복지정책*, 24(4), pp.315-334.

18) 이근수(2010). 사회적 위험과 위기대응적 사회정책의 평가: AHP를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2), pp.193-214.

19) 장지원(2012). 새 정부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조사, 정책현안 전문가 조사 결과보고서 시리즈, pp.12-5.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특히 일자리제공과 교육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을 살펴보고 사회적 위험의 경험여부에 따라 정책적인 요구가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고자 한다.

3. 한국사회의 사회적 위험: 가계적자, 주거 및 고용불안정을 중심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된 사회적 위험은 어떤 것이고 그 실태가 어떠한지 가족의 경제적 위험 및 일상생활의 위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여유있는 생활과 저축 등이 가능한 풍요로운 재정상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는 가족의 안녕과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계적자, 주거 및 고용 불안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삶과 사회에 대한 조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에서는 지난 1년간의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저축을 함’, ‘생계유지’, ‘저축을 사용’ ‘저축을 사용하고 모자라서 대출을 받음’으로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약 10% 만이 저축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90%는 여유없는 생활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혹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저축을 할 수 있는 가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전체 응답자들의

표 1. 가족의 경제상황: 가계적자 및 대출 경험 여부

(단위: %)

	범주	응답율		범주	응답율
연령	20대	16.9	교육	중졸 이하	15.0
	30대	18.4		고졸 이하	22.1
	40대	19.8		대재 이상	19.6
	50대	22.4	직업	관리직	10.0
	60대 이상	20.8		사무직	21.9
소득	100만원 미만	21.5	직업	자영업	20.1
	100~200만원 미만	19.0		노동자	19.9
	200~300만원 미만	22.7		고용지위	정규직
	300~400만원 미만	15.2	비정규직		27.3
	400만원 이상	15.0	전체		19.7

자료: 삶과 사회에 대한 조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68%의 가구는 저축도, 적자도 아닌 '생계를 유지'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1%가 저축해 놓았던 돈을 사용하고 약 8%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이하의 소득층, 학력별로는 고졸자들이 가계경제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축한 돈을 쓰거나 그것도 모라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고용지위별로는 비정규직에서 가계적자가 많이 경험되고 직업별 주별로는 전문/관리직을 제외한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등의 나머지 직업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chi^2=4.140^*$

주거불안정은 향후 1년 이내에 집값 부담으로

인하여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가능성이 있다' 혹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주거불안정은 20대~40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200만원 미만의 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주거불안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이나 고용지위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무직 종사자와 비정규직에서 주거불안정이 상대적으로 높다.

- 1) 교육 $\chi^2 = 22.01^{***}$ 2) 연령 $\chi^2 = 43.39^{***}$
- 3) 직업 $\chi^2 = 32.35^{***}$

고용불안정은 '귀하가 원한다면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표 2. 주거불안정 경험 여부

(단위 : %)

	범주	응답율		범주	응답율
연령	20대	27.7	교육	중졸 이하	10.6
	30대	31.4		고졸 이하	21.3
	40대	26.3		대재 이상	27.8
	50대	15.7	직업	관리직	21.1
	60대 이상	7.3		사무직	29.9
소득	100만원 미만	31.8		자영업	22.5
	100~200만원 미만	30.7		노동자	27.0
	200~300만원 미만	22.1	고용지위	정규직	27.1
	300~400만원 미만	21.5		비정규직	31.7
	400만원 이상	16.1	전체	22.1	

자료: 삶과 사회에 대한 조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

측정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직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고용불안정성이 특히 높았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의 고용불안정성의 경험이 가장 크지만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모든 직종에서 전체 응답자의 10% 이상이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관리직, 사무직, 자영업 등의 종사자들이 유사한 정도의 고용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지위별로는 비정규직에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비정규직 $\chi^2 = 37.47^{***}$

4.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사회집단별 사회정책 수요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대응의 필요성

Bonoli(2007)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의 기저에 놓인 사회적 변동은 레짐별 또는 국가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국가마다 시기적으로 다르게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²⁰⁾. 또한 전후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 독립변수들, 즉 사회경제적 발전, 정치적 동원, 제도적 영향은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설명변수이며 이러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레짐 혹은 국

표 3. 고용불안정 경험 여부

(단위: %)

	범주	응답율		범주	응답율
연령	20대	18.6	교육	중졸 이하	22.4
	30대	13.4		고졸 이하	13.4
	40대	9.8		대재 이상	12.7
	50대	12.7	직업	관리직	13.6
	60대 이상	22.4		사무직	12.7
소득	100만원 미만	25.0	직업	자영업	11.8
	100~200만원 미만	16.1		노동자	16.7
	200~300만원 미만	8.6		정규직	9.6
	300~400만원 미만	10.1	고용지위	비정규직	34.3
	400만원 이상	10.9		전체	14.2

자료: 삶과 사회에 대한 조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

20) Bonoli G.(2007). "Time Matters: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 Adap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pp.495-520.

가 간에 중요한 차이점들이 나타난다²¹⁾.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위기는 예견할 수 없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금융위기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개방성으로 인해 각 나라들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충격을 통하여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리는 국가, 시장(기업), 가족 등 세 가지 원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위험이 분배 또는 분산되어 오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즉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한 복지국가는 기초생활의 충족과 교육의 확대를 통해 개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지만, 역으로 위험사회가 광범위하게 도래하면서 계급의식을 약화시키고 복지국가의 기능도 크게 약화되었다²²⁾.

현재 시장과 가족은 위험관리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에 국가가 위험관리의 주체가 될 것이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복지축소 정책 등을 통하여 복지국가는 위험관리를 기업(시장)과 가족에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노동시장 변화와 가족의 불안정 등과 같은 외생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변화 등 국가의 정책변화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²³⁾.

한국의 복지지출은 2014년 현재 GDP의 10.4%인데 OECD 평균인 21.6%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

을 달성하려면 30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복지지출 추계는 인구 고령화, 연금 수령자 증가 등에 대한 자연증가분일 뿐 복지정책 확대와 같은 변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OECD 복지지출 수준이 감소하지 않는 한 한국이 복지정책 확대 없이 OECD 국가와의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회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문제, 성장둔화에 따른 실업문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요청되며 이와 함께 복지재정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²⁴⁾.

최근의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인식에 대한 차원 중 ‘위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Capability and Measurement)’의 평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위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 점수는 7점 만점에서 평균이 중간 이하인 3.32점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생활, 생애주기, 환경에 대한 평가가 낮아서 국민들은 정부가 이러한 영역에서 대처능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젊은층과 고학력층의 평가가 더욱 낮았는데, 특히 30-40대와 대졸자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대책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²⁵⁾.

21) 이주해(2011). 한국의 사회적 위험 관리전략과 거버넌스, 정부학연구, 17(2), pp.3-30.

22) 정무권(2012). 앞의 책.

23) 김영란(2009). 사회적 위험구조의 변화와 대응: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위험관리 비교, 평화학 연구, 10(3), pp.153-176.

24) 장지원(2016).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한 전문가 조사, 정책현안 전문가 조사 결과보고서 시리즈, pp.13-2, 한국행정연구원.

25) 김미숙 외,(2013). 앞의 책.

2) 복지지향: '성장보다 복지우선', '증세를 통한 복지증진'에 대한 태도

여기에서는 복지지향 및 복지지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고,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별 각각의 사회집단이 어떠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정집단의 정책적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에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령, 학력, 소득, 사회위험의 경험여부에 따른 복지 지향, 국가책무성, 정책수요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복지지향 중에서 '복지 대 성장' 중 어떤 것을 우선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응답자들에게 다음의 두 문항 즉 1) '경제성장을 위해 복지를 줄여야 한다' 2)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친복지태도인 '경제성장보다 복지우선'을 선택

한 사람들의 소득수준, 연령, 학력별 분표를 알아 보았다. 특히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로 나타나는 복지 의식의 차이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 경험 여부에 따라서 복지지향에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소득자, 4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은 '성장보다는 복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서 '성장보다 복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이하의 저학력층과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지지율이 높다.

연령, 학력, 소득수준별로는 중간집단 보다는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에서 동시에 '성장보다 복지'를 지지하는 U자 형태의 지도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젊은층과 노년층에 동시에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

표 4. 복지지향: 성장보다 복지

(단위: %)

	범주	응답율		범주	응답율
연령	20대	58.1	교육	중졸 이하	55.8
	30대	56.9		고졸 이하	46.9
	40대	45.6		대재 이상	53.8
	50대	45.1		고용안정	50.0
	60대 이상	52.5		고용불안정	58.1
소득	100만원 미만	55.7	사회위험 여부	경제위험무	49.1
	100~200만원 미만	49.0		경제위험유	62.9
	200~300만원 미만	54.2		가계유지/흑자	49.9
	300~400만원 미만	44.3		가계적자/대출	55.5
	400만원 이상	52.3		정규직	49.7
전체		51.0	고용지위	비정규직	54.6

자료: 삶과 사회에 대한 조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

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력층이 복지확대에 대한 규범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층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저학력, 저소득층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의 수혜층이기에 복지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학력, 고소득층은 복지확대를 한국사회의 제도적 발전으로서 이해하고 이를 이념적, 실천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연령, 교육, 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는 다른 차원인 '사회적 위험의 경험' 유무로 복지지향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보았을 때는 사회적 위험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난다.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위험을 경험하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그리고 가계적자 및 대출을 받은 집단, 가계적자 및 대출을 받은 집단에서 복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위험(의식주 등의 기초생계 어려움,

공과금, 보건진료비, 교육비 등의 기본 생활유지비용의 부족 등)을 경험한 집단에서 복지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고용불안정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복지정책의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 연령 $\chi^2=12.22^*$

2) 사회위험; 경제위험 경험 $\chi^2=10.95^{**}$

다음에서 살펴 볼 복지지향은 '복지 대 증세'에 대한 문항이다. 1) '복지혜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세금을 더 적게 걷어야 한다' 2)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라도 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의 두 문항 중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요인별 분포를 알아 보았다. '증세 통한 복지확대' 의견에 대한 찬성률은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표 5. 복지지향: 증세통한 복지증진

(단위 : %)

	범주	응답율		범주	응답율
연령	20대	51.8	교육	중졸 이하	49.7
	30대	49.8		고졸 이하	41.5
	40대	43.4		대재 이상	50.3
	50대	44.6		고용안정	46.3
	60대 이상	44.7		고용불안정	58.1
소득	100만원 미만	41.2	사회위험 여부	경제위험무	46.8
	100~200만원 미만	46.7		경제위험유	46.9
	200~300만원 미만	48.2		가계유지/흑자	46.5
	300~400만원 미만	48.1		가계적자/대출	46.6
	400만원 이상	58.5		고용지위	정규직
전체	47.6	비정규직	49.1		

자료: 삶과 사회에 대한 조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

다. 즉 증세를 감당할 수 있는 집단은 고소득층이며 이들의 월소득은 평균 4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월소득 400만원 미만 집단은 지지도의 큰 차이가 없으며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소득집단에 비하여 매우 낮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젊은 층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의 저학력층과 대재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높은 찬성율을 보인다.

1) 교육 $\chi^2=7.24^*$

2) 사회위험 경험; 고용불안정 $\chi^2=4.46^*$

사회위험의 경험유무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보면,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특히 비정규직 종사자는 정규직에 비하여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에 대하여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위험관리의 공적제도인 사회보험 공적부조에 대해 명목상 선진국 수준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사회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적 보호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다.

최근의 복지정책에 관한 전문가조사 결과에서 현재 제공되는 복지프로그램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은 '보건'(건강보험 등 보건의료)이며 반면 '주거(임대주택공급 및 전월세자금융자)' 프로그램은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만족스러운 복지프로그램 역시 '보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미흡한 복지 프로그램은 '가족(가족수당·아동보육·육아휴직 등)'과 '적극적 노동시장(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 양성평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여기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어떤 정책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역할을 '일자리제공', '보건의료제공', '노후생활 지원', '실업자 생활지원', '대학생지원', '주거제공', '육아서비스 제공' 등으로 나누어 사회집단별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일자리제공, 보건의료제공, 노후생활지원, 실업자생활지원, 대학생지원, 주거제공, 육아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4점 만점에 2.5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특히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영역은 보건의료제공, 노후생활 지원, 대학생지원의 세 영역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정부의 역할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육아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령층이 육아 및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26) 장지원 (2013). 앞의 책.

표 6.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일자리, 보건의료, 노후생활, 실업자지원, 대학생지원, 주거제공, 육아서비스 제공

(단위: 평균 점수, 최소값=1, 최대값=4)

		일자리	보건 의료	노후 생활	실업자 지원	대학생 지원	주거 제공	육아 서비스
연령	20대	2.93	3.22	3.14	2.83	3.14	2.77	2.91
	30대	2.88	3.12	3.04	2.75	3.06	2.74	3.0
	40대	2.88	3.13	3.10	2.90	3.08	2.83	2.86
	50대	2.86	3.05	2.99	2.71	3.05	2.76	2.80
	60대 이상	2.93	3.04	3.03	2.73	3.02	2.64	2.70
소득	100만원 미만	2.92	3.19	3.14	2.91	3.15	2.83	2.72
	100~200만원 미만	2.86	3.12	2.99	2.78	3.03	2.81	2.91
	200~300만원 미만	2.81	3.11	3.09	2.81	3.13	2.73	2.90
	300~400만원 미만	2.94	3.11	3.15	2.71	2.95	2.62	2.81
	400만원 이상	2.98	3.25	3.08	2.97	3.08	2.80	3.02
교육	중졸 이하	2.95	3.04	3.04	2.71	3.10	2.71	2.80
	고졸 이하	2.87	3.12	3.07	2.82	3.05	2.76	2.78
	대재 이상	2.89	3.13	3.06	2.80	3.08	2.76	2.95
사회적 위험	고용안정	2.88	3.13	3.05	2.79	3.05	2.76	2.86
	고용불안정	2.82	3.16	3.17	2.92	3.19	2.76	2.95
	경제위험무	2.85	3.08	3.04	2.76	3.05	2.71	2.81
	경제위험유	3.08	3.25	3.15	2.91	3.16	2.96	3.09
	가계유지 / 흑자	2.86	3.10	3.04	2.76	3.05	2.74	2.84
	가계적자 / 대출	3.03	3.17	3.14	2.88	3.14	2.81	2.93
	주거안정	2.87	3.08	3.04	2.75	3.06	2.69	2.82
	주거불안정	2.99	3.25	3.15	2.92	3.09	2.95	2.99
전체	2.89	3.11	3.06	2.79	3.07	2.75	2.86	

자료: 1) 연령: 육아서비스 제공 $\chi^2=3.90^{**}$

2) 교육: 육아서비스 제공 $\chi^2=5.05^{**}$

3) 경제위험 경험: 일자리 제공 $\chi^2=16.55^{***}$ 보건의료제공 $\chi^2=9.95^{**}$ 실업자 지원 $\chi^2=5.76^*$
주거제공 $\chi^2=13.14^{***}$ 육아서비스제공 $\chi^2=19.75^{***}$

4) 가계수지(가계경제상황): 일자리제공 $\chi^2=10.11^{**}$ 실업자 지원 $\chi^2=4.33^*$

5) 주거불안정 경험: 일자리제공 $\chi^2=5.64^*$ 보건의료제공 $\chi^2=12.29^{***}$ 실업자 지원 $\chi^2=8.76^{**}$
주거제공 $\chi^2=20.42^{***}$ 육아서비스 제공 $\chi^2=8.01^{**}$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항목별로 수요집단을 살펴볼 때, 특히 '육아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은 대재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높으며 '일자리 제공'과 '대학생지원'에 대한 요구는 중졸이하의 저학력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육아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의 정책 수요집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지지도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 소득층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부의 책임에 대한 강한 요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일자리, 보건의료, 노후생활, 실업자 생활지원, 대학생지원, 주거제공, 육아서비스 제공 등 모든 영역에서 4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소득층도 생애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주거불안정,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일가족 갈등, 가계적자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경험한 집단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

인지 알아보았다. 사회적 위험을 경험한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보건의료제공, 노후생활지원, 대학생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회적 위험별로 볼 때, 경제적 위험, 가계수지 적자, 주거불안정 등을 경험한 층에서는 보건의료제공, 노후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가장 크게 인식하며, 대학생지원과 육아서비스 제공, 일자리제공에 대한 요구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고용불안정을 경험한 층에서는 보건의료제공, 노후생활 지원, 대학생지원에 대한 정책적요구가 높다. 일가족 갈등을 경험한 집단에서도 역시 보건의료제공, 노후생활 지원, 대학생지원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가계적자 및 대출집단은 보건의료제공, 노후생활 지원, 대학생 지원 및 일자리제공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위험을 경

표 7.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회귀분석

독립변수	B(beta)
성별(남성=1)	.205(.029)
연령	-.010(-.036)
고졸	-.516(-.074)
대졸 이상	-.713(-.103)
가구소득	.014(.007)
경제적 위험	.298(.072)^
가계적자	.369(.079)^
주거불안정	.548(.157)***
직업불안정성	-.126(-.030)
상수	19.72***
R ²	.047

자료: *** p<.001 **p<.01 *p<.05 ^p<.1

합한 집단에서는 일자리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지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적 위험 중 주거불안정, 가계적자 및 대출을 경험한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일자리 제공, 보건의료제공, 실업자 지원, 주거제공, 육아서비스 제공 등의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많이 필요로 하며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은 일자리제공, 보건의료제공, 노후생활지원, 실업자생활지원, 대학생지원, 주거제공, 육아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전반적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표 7>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주거불안정을 경험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가장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위험과 가계적자의 경험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들 중 특히 주거불안정을 경험하는 것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를 크게 증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령, 소득, 교육 등의 사회적인 격차보다 더욱 직접적으로는 사회적 위험 즉,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에서의 경제적 위험과 가계적자 및 대출 경험, 혹은 주거불안정 등을 경험함으로써 인해 쉽게 취약계층화되고, 이는 정책적 수요를 발생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 나가며

한국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대와 사회적 보살핌의 부족,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증대, 절대적·상대적 빈곤의 증가, 근로빈민층 확대, 사회적 양극화 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의 위험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생계위험과 고용불안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OECD 2014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3.3%로 회원국 평균 9.1%보다 크게 낮은 반면, 고용율이 64.2%로 OECD 평균 65% 보다 낮다. 그 이면에는 ‘청년실업’ 특히 고학력 미취업 문제가 있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가까운 미래에 실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증가, 특히 임시직 위주의 고용관행이 지배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지위별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중에서 경제적 위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원인으로, 고용과 소득이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과거에는 남성부양자 모델 하에서 가족의 보호 하에 있었던 여성 및 청년, 노년층이 사회적 위험의 담지자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단절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혹은 비정형적인 직업경력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과거 고학력층이 종사하던 안정적인 직업군이었던 사무직 또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다. 오히려 일상생활 위협이나 가계재정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책적 수요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볼 때, 젊은 층과 노년층, 사회적 위험을 경험한 층에서 친복지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고학력, 고소득층에서도 긍정적인 복지지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저학력, 저소득층은 복지의 수혜층이기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복지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고 고학력, 고소득층은 복지를 한국사회의 제도적 발전으로 이해하고 이를 이념적, 실천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위험의 경험은 복지지향에서 주요한 변수가 된다. 사회적 위험의 경험집단과 무경험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고용불안정이나 경제적 위험을 경험한 집단, 비정규직 혹은 가계적자 및 대출을 받은 집단에서 복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식주 등의 기초 생계 어려움, 공과금, 보건진료비, 교육비 등의 기본 생활유지비용의 부족 등의 경제적 위험을 경험한 집단에서 복지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고용불안정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집단별 요구를 살펴볼 때 전 연

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영역은 보건의료제공, 노후생활 지원, 대학생지원의 세 영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위험의 경험집단은 일자리, 실업자 지원, 주거생활지원, 육아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수요가 유의미하게 높다. 사회적 위험 중 경제적 위험, 주거불안정, 가계적자 및 대출을 경험한 집단들이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에 있어서 정부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사회적 위험 중에서 주거불안정은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사회집단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각계의 구체적인 요구와 한국사회의 변화, 미래 복지수요를 분석한 큰 틀에서의 복지 패러다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정책의 대상집단을 기존의 소득계층별로 단순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각 개인이 당면한 생애과정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수준과 영역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요자 중심의 보다 차별화된 사회정책의 수립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다수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